

세종대왕의 리더십 '주목'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 개최

야당은 특검을 발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은 거부권 요청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등 극한의 대결로 치달는 정치 갈등 등에 대한 해법으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실, 전라캐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주최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황문규 전라캐뮤니케이션연구원 조직지원위원장은 "편향된 미디어 △가짜뉴스 △우리나라 언론의 편향성 △한국과 미국의 미디어 편향성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디어 편향성 극복과 선거 제도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해외동포총대내기운동협의회 최용기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세종대왕의 국가 경영 철학으로 △유능한 인재의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의 국가경영 △정조 중심의 국가경영 △삼정의 국가경영 △대동천고의 국가경영의 여섯 가지를 예로 들어 이런 세종대왕의 정치 지도력과 국가 경영 철학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 통합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서 상지대학교 최기일 교수 또한 "세종대왕의 지도력, 즉 정치 리더십과 국가 경영의 핵심은 대표적으로 유능한 인재 등용, 지식 중심의 국가 경영, 사대교린 정책 추진, 창조 중심의 국가경영, 감동의 국가 경영, 훈민정음 창제와 보급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조병현 영천미래연구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종대왕의 업적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더욱 철저히 고증하고 연구하여 널리 알려야 하며 그 중 가장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등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세미나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국유권자중앙회 제공)

유능한 인재 등용 · 지식 중심 국가 경영 등으로 들어 '제3당에 표 준 유권자 의사 반영 안돼는 양당 체제 극복'

중요한 일이 세종대왕의 생가터 복원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정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원장은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등을 외국의 궁들과 비교하며 "검소했던 세종대왕의 집무실과 침실 모습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진 소통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오늘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 할 리더십의 덕목이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결속을 약화하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오늘날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편단 정치를 앞세운 줄 세우기, 내 편 아니면 약책제인"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최자인 김창남 전라캐

뮤니케이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이 세미나가 극단과 독단과 국민기만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특검 단독 통과와 끝없는 거부권 행사의 반복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달고 있는 의정 갈등 앞에서 한없이 무거운 정치권을 보여 정치 갈등 극복과 사회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등 제3당에게 표를 준 1,0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양당 체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를 위해 오는 11월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언"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돌며 정치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인권문화축제 개막

2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문화축제'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문승우 도의회장, 김양이 도 인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공연을 보고 있다.

건보 '고액 체납자' 체납 기간 길어지고 금액 많아져

민중 박희승 의원 "체납 보험료 징수 높이 귀한 노력 필요"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줄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금액도 많아지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로 전체의 77.5%였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체납자는 57만 5천 세대로 전체 체납자의 61.1%

였다. 1,000만원 이상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1,747만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세대당 평균 체납액 123만

원에 비해 14.2배 많았다. 한편, 고액 체납자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의 28.1%가 3년 이상 체납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는 절반 이상(53.6%)이 3년 이상 체납하고 있다. 10년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가 5,164세대(30.1%)로 체납 금액도 762억원(25.4%)이다.

박희승 의원은 "성실납부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급여 제한, 압류, 인적 사항 공개 등 체납 보험료 징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남원=김기두 기자

철도시설 · 열차 내 범죄 다시 증가세

매년 평균 2500여건 발생... 성폭력이 최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줄었던 철도 여객 수요가 회복하면서 철도 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위험 초래 등 철도안전법이 888건 발생했다. 2019년 2,450건이던 철도시설 및 열차 내 범죄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줄면서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엔데믹으로 여객 수요가 회복하면서 2,891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2,726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철도시설 및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2,410건으로 밝혀졌다. 연평균 2,500건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2019년 수원역 98건 △2020년 서울역 71건 △2021년 용산역 59건 △2022년 부산역 79건 △2023년 부산역 84건이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134건, 연평균 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횡령, 손괴, 사기 기타 범죄가 3,421건이 발생했으며, 상해 또는 폭력이 2,274건, 절도가 1,693건, 열차 운행

노선별로는 매년 경부선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다. 경부선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9년 301건 △2020년 311건 △2021년 294건 △2022년 381건 △2023년 344건으로 연평균 326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훈 기자

'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사례 급증

최근 5년동안 증가세... 올해 6월 기준 2만3449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

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6월)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6월) 72.7%로 반등했다.

한편,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17.4%), 51~60세 2,978명(17.3%) 순으로 많았다.

한편,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17.4%), 51~60세 2,978명(17.3%) 순으로 많았다.

/이만호 기자 · 익산=이재훈 기자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 설치 쉽지 않아" 축산현장 여건 고려한 합리적 방안 마련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가축분뇨 규제 개선 농정간담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 현장 애로사항 전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군)은 9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



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차 개선 명령, 2차 조업정지 명령, 3차 허가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안호영 위원장은 "조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관리가 필요하지만,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 저감기술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규제 관련 농축산 현장과 정부의 의견이 크고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농림부도 의견이 다른 만큼, 국회에서 모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 지역소멸대응특위 간사 선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성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2023년 5월에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